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최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현실에 지방자치는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흔히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화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 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교과서적인 정의는 먼 나라 일로 들릴 뿐이다. '지방의원 막가파식 난동' '제왕적 단체장' '도 넘은 지자체 비리' '심각한 지방의원 범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지역신문들의 제목이다.

물론 지역인론이 지방자치의 어두운 면만 너무 부각시키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극히 일부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일을 침소봉대해 전부인 양 오도하고 있다는 이른(異論)도 나올 수 있다. 꼭 그렇까.

'견제·감시'의 무풍지대

가장 최근에 지방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만 보자. 화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3명은 집행부 인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군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에게 폭언과 함께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5월 한 의원이 술에 취해 당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방의회인지 폭력집단인지 헷갈릴 정도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 2명은 회기 중인

지방자치 이대로 '좌초'하게 둘 건가

지난 5일 한 의원 사무실에서 지인과 도박꾼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는 망신을 샀다. 전 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의 전·현직 지방의원 15명은 향소심에서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지만 시 의회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한 순천시 의원은 시정 잘못을 했다며 공무원들을 수차례 고발해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직 전남도의원은 도 출연기관에 딸을 가져 경력증명 등을 이용해 입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당한 인사압력에 대한 논란이 이

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예외는 아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일부 지자체단체장들의 인사 전횡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권·불법 수단을 동원한 '측근 챙기기' 특징인을 위한 '특혜 채용' 등은 다반사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만 봐도 지방자치가 골병이 든 것은 분명하다. 지방자치의 실패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민의 무감각과 무대응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

위를 보고도 이를 응징하지 않는다. 함량 미달의 인물을 공천한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나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인이 당연히 해야 할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니 심부름꾼이 주인을 알고보고 온갖 도둑질을 하며 오히려 거들먹거리고 있지 않은가.

지역인론이나 시민단체도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 결과로 생겨난 지방자치제도가 지역발전은 가로막고 지역민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무관심·불신이 만연한 풍조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과 의원들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객이 뒤바뀐 지방자치

30년 만에 어렵게 꽃 피운 지방자치 열매도 맺기 전에 고사(枯死)하는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과 같은 실 효성 없는 제도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도덕하거나 함량미달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주민의 힘으로 지역 정치판에서 추방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에 정당 공천제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침해받는 등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이 꼭 필요한 제도라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의 연대 책임제도 생각해 볼만하다. 그래야 허투루 공천하지 못할 것 아닌가.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20년이라는 성년의 나이에 걸맞게 제모습을 찾아야 한다. 뒤바뀐 주인과 심부름꾼의 위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인 주민이 지방자치의 감시자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hjung@kwangju.co.kr

오피니언칼럼



김창균

회색빛 도시 건물을 달구는 한낮의 땀방에 도로변 가로수조차 지친 여름이다. 뜨거운 열기로 물이치는 햇살은 어느새 끈적이는 땀범벅이 되어 몸뚱이에 달라붙고, 간간히 스치는 소나기조차도 땀뽀함을 더할 뿐이다.

'의마심원(意馬心猿)'이란 말이 있다. '생각은 날뛰는 말과 같고 마음은 떠드는 원숭이와 같다'고 했으니, 도심 속 탄탄 사무실에서 무더위를 보내는 사립의 마음은 이미 산과 바다에 쫓겨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 보인다. 이럴 때 MS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가정을 한 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휴가, 자녀와 소통하는 기회로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아들과의 대화를 즐겼고, 휴가철이 되면 다른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냈다. 빌 게이츠는 이때를 회상하여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과 같이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했고, 무엇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배우게 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보기에 어린 빌 게이츠는 대들기 좋아하는 문제아였다. 식사 자리에서 화가 난 아버지가 물컵 세례를 안기기도 하였으며, 어머니도 빌 게이츠의 말대꾸에 접시를 여러 차례 던졌다고 하니 말이다. 참 다양한 아버지가 그를 아동 상담사에게 보냈을 때, 상담사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는 한 마디를 전했다.

눈여겨 볼 것은 아버지의 태도 변화이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말대꾸로 보지 않고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엄하고 질제된 교육 환경에서 자란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행동 방식

에 맞춰 아들을 바라보았다. 따라서 빌 게이츠의 독특한 방식은 항상 '틀린' 행동이었다. 하지만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아들의 행동은 자신의 주장이 담긴, 엉뚱하기는 하나 창의적인 생각이었다.

오늘날 빌 게이츠를 만들어 낸 힘은 생각의 전환이었다. 부모가 대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인정한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빌 게이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모와 생각을 나누는 것은 인생에 큰 변화를 준다"는 빌 게이츠의 말은 부모의 역할을 잘 일러준다.

그런데 몇 해 전 행복가정재단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3명 중 한 명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의 가족관계 실태 분석'에 의하면 아버지 3명 가운데 한 명은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특히 자녀의 말대꾸를 꾸짖하면서도 통보와 꾸짖기에 대화의 전부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대하는 휴가를 맞아 산으로 바다로의 여행을 꿈꾸었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가족에 함께 발을 담그고 아이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고, 함께 누워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어야 할까.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통계청의 '2011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아버지와 대화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성적이 좋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대화를 많이 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여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우리는 자녀에게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한 '오피니언'을 수여 합니다. 오피니언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오피니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최영범

중고자동차를 매도·매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관할 시군구청에 매매등등록 한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개인 간에 직거래하는 당사자거래다.

그런데 같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도 세금 등을 납부하며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업자거래는 제약이 많고, 세금을 내지 않고 계약서 작성이 전무인 당사자거래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등록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손해배상 책임,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법·시행령·시행규

칙 등이 세분화되어 있다.

매매업자들이 거래 후 고객과 다툰이 가장 많은 분야가 성능점검 관련이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자동차 구조, 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받아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사고유무 고지와 더불어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5년에 개정된 법은 매수인이 인도일로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km 이상까지 기록부에 '양호'로 검사한 부품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성능점검 업체가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업자는 성능점검 기관을 제외하고 당국에 성능점검업 등록한 업소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자가 성능점검 수수료를 지불한다. 법대로라면 성능점검과 하자보증 문제는 매매업자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매매상에서 차를 구입한 고객들은 성능점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치 매매

상에 있고 품질보증 분야가 아닌 하자도 무조건 수리, 또는 보상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중고차 거래, 민원 대부분은 성능점검과 하자보증 관련이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전국 자동차등록대수 1794만1356대에 중고차 거래대수는 280만6790대다. 중고차거래가 신차거래를 앞선지는 오래전이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 중 사업자거래가 57.5%, 당사자거래는 42.5%다. 광주지역 사업자거래는 62.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국 자동차매매 상사는 4000여 개다. 같은 중고차 거래인데도 사업자에게는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사업자거래와 당사자거래를 구분한다. 법대로라면 성능점검과 하자보증 문제는 매매업자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매매상에서 차를 구입한 고객들은 성능점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치 매매

업자들의 당사자거래에 성능점검이 필요 없는 것은 잘못이다.

전국 매매업자들은 중고차 거래대수의 42.5%인 당사자거래 중 80% 이상은 위장당사자, 즉 가짜당사자로 보고 있다. 당사자거래도 똑같이 성능점검 실시를 해야한다. 아니면 고객도 상사도 불만이 많은 성능점검을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자보증 책임까지 모두 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고차거래 때 의무적으로 당국에 성능점검등록을 매도인이 직접 받아 성능점검기록부가 첨부되지 않은 차량의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허위고지나 점검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성능점검 업소에 전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불·편법, 위장 당사자거래 단속·처벌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수사방관, 법은 있으나 마나며 이는 위장 당사자거래를 묵인하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보호처원에서라도 위장 당사자거래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불법 당사자거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한다.

〈광주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내년 선거, 후보자 면밀히 검토해 훌륭한 일꾼 뽑아야

지연·화연·협연이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제18대 국선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무엇이 주요 고려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론 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소속정당 36.6%, 인물과 능력 33.5%, 정책·공약 14.6% 순으로 후보자를 결정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

거 때는 인물·능력 35.5%, 소속정당 30.1%, 정책·공약 18.1% 순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

유권자들은 소속정당이나 인물·능력을 보고 투표한 경우가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한 경우 훨씬 많았다.

요즘 선거 때 마다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등장한다. 우리말로 '참공약' 또는 '갖춘 공약'이라고 한다. 일반공약과 다른 점은 선

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가 있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

내년에는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이 있다. 우리는 후보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뽑을 것인가.

후보자의 인물·능력·식견·경력·소속 정당·공약 등 여러 가지 선택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과 공약이다. 지역현안의 해결책이나 국정운영의 청사진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에 담겨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

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내년 선거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후보자를 뽑을 때 그 후보자가 과거에 체결했던 공약의 실천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공약을 살펴보고 과거의 것은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으며 미래의 것은 실현 가능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일꾼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잘 짚은 내 한 표가 나라 살림을 융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자!

▲이창익·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시설

갈수록 멀어져가는 영세민의 '내 집 마련' 꿈

광주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현재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대가자가 약 7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건설업체는 물론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공기업마저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 부담이 적어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주거수단이다.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영구임대 입주 대상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구임대아파트는 1만 4000 세대가 채 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공급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내년에 도 공급계획이 없다. 영구임대아파트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세민들에게 3.3㎡당 600만~900만

원을 호가하는 일반 아파트는 '그림에 떡'이다.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은 다양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첩경이다. 효율성만 강조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광주발전연구원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주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강운태 시장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소요재원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 볼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이 조사를 토대로 차질없는 서민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친서민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친서민'의 첩경이 아니겠는가.

주차시설도 없이 관광객 불러 모으겠다고

전남지역 대다수 부두나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 주차장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주차장 시설이 있는 곳도 상당수가 안전장치가 미흡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최근 도내 여항·항만 1109곳과 유람시설 44곳을 대상으로 해안주차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차시설이 있는 곳은 목포 여객터미널과 녹동항 여객터미널, 해남 삼정 선착장 등 114곳에 불과했다. 주차장 설비가 돼 있는 곳은 10곳 가운데 겨우 1개 꼴이다.

그나마 안전성이 확보된 주차장은 21곳(18.4%)에 지나지 않았고 44곳은 일부 안전시설만 설치됐으며, 36곳은 주차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전남 해안시설의 대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주차시설마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주차장과 안전시설의 미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한 달 동안 완도에서만 차량이 바다

로 추락하는 사고 등으로 8명이나 숨졌다. 지난 4월에는 고흥 동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카레리호에 주차하던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져 탑승자 2명이 숨지기도 했다.

국내 관광의 활성화 추세와 접근성 개선 등으로 전남 남해안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전남의 다도해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다. J프로젝트도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주차장 시설 하나 변변치 못한 지금과 같은 기반시설로는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없다. 불편함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며 관광이나 피서술을 사할 일 얼마나 있겠는가.

관광은 고도의 서비스 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풍경이 지니고 있더라도 교통과 숙박, 주차 등 편의시설이 엉터리라면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無 等 鼓

'정관의 치(貞觀之治)'로 나타난a 최고 의 전성기를 이룬 제2대 황제 이세민은 용인술의 대가였다. 그는 능력만 있다면 심지어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과감히 끌어안았다. 그가 평생 가장 신 일한 신하 울지경덕은 원래 수나라의 장수로, 역시 수나라의 장수였던 심상과 함께 투항한 사람이다. 투항한 지 몇 년이 지나 심상이 반란을 일으켜 제압

되자 이세민의 측근들은 "후환을 없애려면 울지경덕도 함께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세민은 그러나 울지경덕을 침실로 불러 "대장부는 서로 의기가 투합하면 작은 의심을 흉중에 두어선 안 된다. 나는 결코 타인의 참소로 어진 이

득인(得人) 과 용인(用人)



연히 그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했다"고 답했다. 위정은 이후 가장 높은 직위인 승상에까지 올랐다.

광주시가 본격적인 인사 시늬에 돌입했다. 시청의 존재목적은 '시민의 행복'이다. 이번 인사가 내부 논리나 친분, 논공행상을 해치지 않겠다"며 오히려 금을 하사했다. 바로 얼마 후 이세민이 전투에서 적장 단웅신에게 쫓겨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울지경덕이 단웅신을 단칼에 베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둔다. 울지경덕은 훗날 이세민이 아버지인 당 고조 이연의 후계를 두고 형 이견성과 싸울 때 끝까지 이세민을 추종하며 큰 공을 세

웠다. 이세민은 인재들 등용할 때 능력을 볼 뿐 친인척이나 연공서열은 배제했다. 황위에 오른 그는, 정적(政敵)인 형 이견성의 참모로 있으면서 "동생인 이세민을 죽여야 한다"고 건의했던 위정을 살려두고 크게 썼다. 위정은 '왜 형제 사이를 이간질했는지'를 묻는 이세민에게 "당시 저는 이견성의 참모였으니 당

연히 그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했다"고 답했다. 위정은 이후 가장 높은 직위인 승상에까지 올랐다. 광주시가 본격적인 인사 시늬에 돌입했다. 시청의 존재목적은 '시민의 행복'이다. 이번 인사가 내부 논리나 친분, 논공행상을 해치지 않겠다"며 오히려 금을 하사했다. 바로 얼마 후 이세민이 전투에서 적장 단웅신에게 쫓겨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울지경덕이 단웅신을 단칼에 베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둔다. 울지경덕은 훗날 이세민이 아버지인 당 고조 이연의 후계를 두고 형 이견성과 싸울 때 끝까지 이세민을 추종하며 큰 공을 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선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